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박근혜정권 최고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역사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반민주적, 반국민적 폭거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단이고 독주입니다.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서 집단적 퇴행과 일탈의 징후마저 느껴집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 여당은 북한공작 운운하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국정운영의 실패를 덮고자 하는 것입니까?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외교 전략 부재, 국가안보를 의심케 만드는 국방전략(KF-X사업)의 부재와 방산비리, 저성장과 양극화, 도탄에 빠진 민생의 어두운 모습을 가리려는 의도입니까?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상논쟁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정권이 해야 할 일, 넘어야 할 일이 태산 같은 이 시점에서 역사전쟁이란 이름으로 이념대결을 일으킨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정운영의 성패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성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원정치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와 모순만 더욱 커져 갈 뿐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국민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정교과서 강행이 불러 올 갈등과 반목으로 우리 국민의 위기극복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박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다 옳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라는 고정관념으로는 통합도 창조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임기 중 최대 실책과 실정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과거로의 폭주를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정권의 실패, 정치의 실종, 민생위기의 심화를 가져 올 뿐입니다.

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야당의 협조를 받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요구 합니다.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학계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결정을 따른다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여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좌우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에 반대하지만 권력이 개입하는 획일화된 국정교과서도 분명히 반대합니다. 권력이 역사에 개입하면 역사는 왜곡됩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의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과 해석으로 성찰과 비판이 가능한 역사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전쟁은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념대결, 정치권의 반목과 대립을 끝내고 함께 공존, 공생의 지혜를 짜내야 하며 그 맨 앞에 대통령이 서 있어야 합니다. 여야정치권도 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과 낡은 정치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독단과 독주로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박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상식과 순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5. 11. 4

국회의원 박 영 선, 안 철 수